

해묵은 민원 풀리겠지만... 난개발·특혜시비 등 난제 첩첩

광주시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민간 개발 배경과 전망

■ 광주시 미집행 도시근린공원 (단위:㎡, 억원)

구분	계			10년 미만			10년 이상(장기미집행)		
	개소	면적	사업비	개소	면적	사업비	개소	면적	사업비
도시공원	29	11.6	28,341	4	0.6	1,422	25	11.0	26,919

녹지 보전이라는 공익과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광주시가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적잖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가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2020년 6월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근린공원 용도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이른바 '일몰제'에 따른 대책으로 민간공원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근거한 특례사업이다. 개발사업자가 5만㎡ 이상의 도시공원 용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를 주거·상업 공간으로 개발하는 제도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공원부지를 사들여 개발할 수 없는 광주시를 비롯한 전국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교육지책이다.

사업의 장점은 녹지공간을 일정 부분 확보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토지 소유자들의 해묵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이다. 사실상 장기미집행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곳의 소유자는 시민들로, 현재 광주시의 미집행 도시공원은 29곳에 면적만 1160만㎡에 이른다. 이 때문에 20여년 가까이 공원부지로 묶여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광주시 공원녹지과 전화민원의 80% 이상이 "언제 묶여있는 땅을 시에서 사주느냐"일 정도다.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문제는 난개발이다. 사업자가 공원부지 전체 면적의 30%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개발방안은 사실상 아파트 건설뿐이다. 필연적으로 수익성을 추구하기 위해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고층아파트가 공원부지에 들어서면 경관을 크게 해치는 등 부작용이 따르게 마련이다. 공원부지가 도심 일찌방이다 보니 특혜 시비도 예상된다.

녹지보전·사유재산권 보호

아파트 외 사업자 수익 못맞춰

인근 주민 "공원 훼손" 반발도

광주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들이 "민간공원 대상부지 가운데 100만㎡ 이상 대형공원은 공원기능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개발(LH공사, 도시공사)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이유다.

개발에 참여한 사업자의 예기치 않은 사업중단 등도 우려된다. 광주시가 추진하던 어등산관광단지조성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재정난과 사업성 부족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300억원대의 부지를 시에 기부하고 먼저 완공한 골프장만을 개장했다. 해당 사업은 10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도시근린공원 전체 부지에서 공원조성 면적과 개발부지의 경계를 정하는 것도 문제다. 경사도가 심한 곳, 나무가 울창해 보전이 필요한 장소를 사업자가 아파트 등의 개발부지로 제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토지 소유자측도 자신의 부지가 공원이나 개발부지에 포함되느냐 여부에 따라 이해득실이 갈릴 수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

토지가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했던 토지 소유자와 달리, 공원경관의 보존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실제 광주 중앙공원의 경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쟁점이다.

노경수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공원 조성사업 추진은 필연적으로 많은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치밀하고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가 장기 미집행 공원을 민간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송정·송암·신용 도시근린공원 등 7곳을 1차 사업대상지로 지정할 방침이다. 서구 중앙공원은 국가지원을 받는 국가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21일 오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성안길에서 총선 지지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힘받는 전대연기론... 국민의당 '安-千 체제' 연말까지 가나

안측 이어 당권 후보들 동조...안철수 대선행보 파란불

국민의당 내에서 정당대회 연기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 측 뿐만 아니라 주요 당권 후보들도 이에 동의하는 입장을 속속 밝히고 있다.

창당 2개월이 갓 지난 신생정당으로 제대로 된 정당대회를 치르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이유와 당권 경쟁을 늦추면 당내 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명분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중진들이 먼저 국회직에 도전한 뒤 성사되지 않을 경우 당권 경쟁에 나서기 위해 시간차를 두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창당 6

를 바꾸는 것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있다.

전정배 공동대표도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신생정당이다 보니 아직 당원들이 정비되지 않았다"며 "12월 이후에는 당권-대권이 분리돼야 하니 앞으로 12월까지 7개월 정도의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과도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12월 정당대회 개최를 주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정기국회 중에는 정책정당, 일하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정당대회 연기를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정당대회가 8월에 열리겠냐, 어렵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반면,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현재 임

시 지도 체제를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며 "하루빨리 정당대회를 열어 당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당대회 연기론에 힘이 실리면서 안 대표가 당을 장악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내년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정당대회가 연기되면 안 대표의 대선 행보엔 파란불이 켜지지만, 당내 다른 대권주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분석이 많다. 국민의당은 오는 26~27일 경기도 양평에서 열리는 당선인 워크숍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조율할 계획이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가 안아줄 때까지 정진 하겠다"

더민주 광주지역 출마자들 권토중래 다짐

고 호남출대론과 친문패권 심판, 수권능력 부족 등 다양한 사후분석들이 있다"면서 "호남 참패의 주된 원인은 시민들의 마음을 미리 읽지 못한 우리의 무능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더민주

광주 출마자들은 시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시작하겠다"며 "시민들께서 다시금 더민주를 따뜻하게 안아주시 때까지 정진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또 "비록 원외에 있지만 시민계

약속드렸던 '삼성 전자사업의 광주 유치'를 비롯한 광주발전 10대 공약의 실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민주 광주시장 또한 다가오는 정당대회 과정에서 재창당을 뛰어넘는 쇄신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도록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광주가 다시 더불어민주당의 심장이 되도록 하겠다. 호남민의 열망인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룩해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종형기자 golee@

아이에게 꿈을 읽어주세요

지금,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1:1 책 읽어 주기가 시작됩니다. 사서와 자원봉사자들이 어린이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의 꿈이 자라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